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생명공학 육성책의 허와 실

화학기업들의 R&D(연구개발) 투자 부진 및 석유화학 부문의 공급과잉, 수익성 저하에 따라 한국 화학산업 성장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생물산업 또는 생명공학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도 정보통신과 함께 마이크로기술, 생명공학을 21세기 3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니 정부가 생명공학을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개발도상국 신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IMF체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벅찬 감은 없지 않다.

화학산업 발전 역사를 보아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Chlor-Alkali, 무기화학 부문이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Fine 및 Specialty Chemical이 빛을 발했으며, 최근들어 생명공학 및 Biotech이 주목받고 있다. 부가 가치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생물산업 또는 생명공학 발전대책을 들여다보면 발표문만 요란스럽지 실상 주목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중복적인 내용을 무작위로 발표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화학산업 관계자 및 관련연구단체, 학계의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산업자원부는 생물산업과 정보기술, 광, 초전도, 멀티미디어, 환경설비 등을 21세기 「돌파산업」으로 선정, 전략적으로 중점 육성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총 791억원을 투자해 춘천, 대전, 인천의 생물산업 기술센터를 완공함으로써 생물산업 혁신거점을 네트워크화하고 생물벤처기업 등 핵심기술기반형 벤처창업도 촉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2000년4월 한국기술거래소를 본격 가동해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시장을 조성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00대 기술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취약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부도 생명과학, 환경, 신소재, 정보기술, 차세대반도체 등 미래기술 개발에 역점을 둔 「과학기술 중점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2000년 인간유전체 연구와 국내 자생 식·약용 식물 다양성 연구에 2232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보혁명을 뒤이을 유망 신산업인 생명과학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2002년까지 생명과학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10년내에 위암 및 간암 생존율을 20%에서 60%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첨단 신소재 분야에 2000년 1474억원을 투입하는 등 2005년까지 Tera급 반도체 나노소재 및 집적도 1만배의 탄소나노튜브를 개발하며,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범에 대응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기물 재활용기술과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2000년 1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자부와 과기부가 제시한 내용은 그럴싸하나 육성목표와 내용은 연관성 및 구체성이 전혀 없다.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 관련기술센터 육성을 위해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관련연구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뿐이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200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느껴지나 역시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생물산업 기술인프라 구축도 좋고, 생물산업상 제정도 좋지만 최우선적으로 생물산업 또는 생명공학 용어부터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업과 연구개발을 착각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산업과 연결되지 않는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에 바탕을 두지 않는 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를 끌어들이 설비 및 기술을 들여온 것이 오늘날의 석유화학이고, 그래서 구제할 수 없는 부실화의 길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 또는 지원해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뜬구름 잡는 「홍설수설」로 국민일반을 현혹하려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정부부처 및 관료들은 으레 그렇거니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아무리 한국 관료사회의 특성(?)을 인정한다해도 21세기 국가발전의 초석을 가다듬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서 마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료들과 연구단체, 몇몇 관련기업들이 예산을 나눠먹는 생명공학 육성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화학저널 2000/3/6>